

ESG 동향 뉴스 클리핑

이슈 검색기간 : 2023.05.05(금) ~ 2023.05.11(목)

제공일시 2023 05 19 Fri

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

문의 02 398 7675

ESG 동향 뉴스 클리핑

이슈 검색기간 : 2023.05.05(금) ~ 2023.05.11(목)

제공일시 2023 05 19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

뉴스 클리핑 주간자료

1. 인도네시아, 올 하반기 탄소배출권거래제(ETS) 도입

- 주요 탄소배출국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올 하반기에 탄소배출권거래제(ETS)를 도입하기로 했음. (ESG경제, 2023.05.08) 이신형 기자
- 인도네시아는 2월, 국영 유틸리티 기업 PLN이 보유한 99개 석탄 화력발전소에만 적용하는 초기 단계의 탄소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바 있음.
- 인도네시아의 ETS는 에너지와 운송, 쓰레기 처리, 제조업, 농업과 임업 분야에 적용됨.
-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 기업에도 탄소배출권 매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으며, 에도 마헨드라 해양투자 조정관은 인도네시아 배출권시장은 잠재력이 큰 시장이라며, 외국인의 시장 참여 기대감을 드러냈음.

2. 더 강력한 메탄 배출 감축규정을 추진하는 EU의회 의원들

- EU 의회 의원들은 499 대 73으로 석유, 천연가스, 석탄뿐 아니라 바이오메탄을 포함한 부문에 초점을 맞춘 메탄 배출 감축을 위한 새로운 법에 대한 입장을 채택했다고 발표했다. (ESGToday, 2023.05.09) Mark Segal 기자
- 새로운 법은 메탄 배출을 줄이도록 하는 첫 번째 유럽연합 전체의 법이 될 예정임.
- 또 이번 법은 EU의 '핏포55'의 로드맵 일부를 형성하며, 메탄 배출을 측정, 보고, 검증해야 한다는 요구사항, 메탄 누출을 감지하고 연소를 제한하는 규칙, 메탄 배출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모니터링 등을 요구했음.
- EU는 2030년까지 메탄 배출 30%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'글로벌 메탄공약'의 창립서명국으로 참여한 바 있음.

3. 미 환경청, 대대적인 발전소 탄소배출 감축계획 발표

- 바이든 행정부의 환경청이 탈탄소 전략 중 가장 큰 단계인 미국 전력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면적인 계획을 발표하여 향후 산업계는 수십억 달러의 신규 장비를 설치하거나 폐쇄해야 할 것으로 보임. (Reuters, 2023.05.12) Valerie Volcovici 기자
- 이번 발표에 따르면, 신규 및 기존 대형 천연가스공장은 탄소배출을 90%까지 제거하는 CCS를 설치하거나, 2032년까지 수소 30%로 포함한 대체연료, 2038년에는 수소 96% 등으로 가동해야 함.
- 공장 굴뚝에는 탄소 포집장치(CCS)를 설치하거나, 초저배출 수소를 연료로 사용해야 하고, 2040년 이후 가동되는 석탄발전소는 2030년부터 CCS기술을 설치해야 하고, 2035~2040년 사이 폐쇄되는 석탄발전소는 2030년까지 40%가스를 사용해 공동연소해야 함.
- 18개월 이상 논의가 이어져온 이번 제안은 EPA가 화석연료 및 재생에너지 전환의 전반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, 현장에서 적용되는 공장의 기술기반 표준을 설정하고 규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나왔음. 최종 결정까지 약 1년이 걸릴 것으로 보임.

1. 원전·재생e 활용 국가 전략산업 전력공급체계 마련

- 오는 2036년까지 원전 68%가 증가하고,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송변전설비 신설 등 국가 기간망 보강을 위한 장기 송변전설비 계획이 확정됐음. (에너지플랫폼뉴스, 2023.05.08) 정상필 기자
- 한국전력은 제282차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'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'이 최종 확정됐다고 8일 밝혔음.
- 우선, 한전은 봄·여름·가을·겨울과 아침·점심·저녁·심야 시간대별 전력계통 해석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,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따른 미래 불확실성을 사전에 분석해 전력망 보강방안을 수립함.
- 또, 서해안·수도권 초고압직류송전(HVDC, High Voltage Direct Current) 기간망을 구축,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력이 부족한 수도권으로 전력을 공급함.
- 유연송전시스템(FACTS, Flexible AC Transmission System) 등 전력망 건설 대안기술(NWAs, None-Wire Alternatives)도 확대할 예정임.

2. 정부,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... "규제 과감히 혁신"

- 정부가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글로벌 스탠더드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를 올해 2~3개 시범 조성 후 2027년까지 권역별로 10개의 특구를 조성할 계획임. (이투데이, 2023.05.08) 정수현 기자
- 정부는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를 시행할 방침으로, 글로벌 혁신 특구에서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, 금지 사항을 제외한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이 가능해짐.
- 또, 외국에서는 활발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만 국내는 실증도 허용되지 않는 첨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, 해외실증거점을 조성해 제품개발과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.
- 아울러, 미국의 글로벌 인증기관인 UL Solutions와 협력해, 전반적인 첨단 분야 스타트업의 미국 실증 및 기술혁신을 지원함.

3. "대기업도 감당 어려워"...재계, ESG공시 의무화 속도조절 촉구

- 대한상의는 '제3차 ESG 아젠다 그룹회의'를 개최, 2025년으로 예정된 ESG공시 의무화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기업경영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으며, ESG공시 의무화 도입시기를 늦출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. (머니투데이, 2023.05.09) 이재윤 기자
- 또 협력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합산하는 Scope3 단계는 주요 대기업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으며, 정부지원정책 확대, 전문인력 양성방안 필요성, ESG평가시장 투명화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했음.
- ESG평가기준과 관련, 국내 ESG평가기관은 글로벌 평가기관에 비해 공개정보가 적으며, 명확한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'깜깜이 평가'를 줄여 대상기업의 ESG품질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.
- ESG아젠다그룹은 SK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, 현대자동차그룹, 삼성SDI 등 주요 대기업과 신한금융지주·하나은행 등 금융사 19곳으로 구성됐음.

1. EY, 블록체인 기반 탄소추적 솔루션 출시/ IBM, 클라우드 컴퓨팅 배출량 추적 솔루션

- 글로벌 컨설팅기업 EY는 기업의 탄소배출량 측정 및 추적, 탄소 크레딧에 대한 투명성과 추적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개발된 새로운 솔루션 'EY OpsChain ESG'를 출시했다고 발표했다.
- EY의 블록체인 SaaS 플랫폼에서 베타 버전으로 제공되는 새로운 솔루션은 기업이 제품의 탄소 배출 토큰화를 통해 현재 CO2 위치를 확인하고 보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.
- 한편, IBM도 클라우드 워크로드와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을 추적하고 이를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IBM Cloud Carbon Calculator의 출시를 발표했다.
- 기업이 고성능 컴퓨팅, 인공 지능 및 기계 학습과 같은 데이터 및 에너지 집약적인 워크로드의 사용 증가와 ESG 규제 및 배출량 보고 요구 증가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라고 밝혔다.

[\(ESGToday, 2023.05.10\) Mark Segal 기자](#)

[\(ESGToday, 2023.05.10\) Mark Segal 기자](#)

2. 허니웰, 이산화탄소를 지속가능한 항공연료로 전환하는 기술 출시

- 산업 솔루션 기술회사 허니웰은 포획된 이산화탄소에서 SAF(지속가능한 항공연료)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솔루션 UOP eFinishing 기술의 출시를 발표했다.
- 이 회사는 또한 HIF Global을 새로운 기술의 첫 번째 고객으로 발표했으며, 솔루션은 세계 최대의 eFuels(탄소중립 연료) SAF 시설로 예상되는 곳에 배치될 예정이다.
- 허니웰에 따르면, eMethanol(탄소중립 메탄올)을 eSAF로 변환하는 이 새로운 기술은 기존의 제트 연료에 비해 온실 가스 배출을 88% 줄일 수 있음.
- eSAF는 항공기 기술이나 연료 인프라를 변경하지 않고도 드롭인 대체 연료로 사용할 수 있음.

[\(ESGToday, 2023.05.10\) Mark Segal 기자](#)

3. MSCI, 전체 글로벌 상장기업 3분의 1 스코프3 공개

- MSCI의 신규 보고서에 따르면, 스코프3 배출량 공개를 하는 상장기업이 3분의 1 이상으로 증가했음.
- MSCI는 탈탄소를 약속한 기업 또한 증가했으나, 하지만 기업의 기후 공약에도 불구하고 올해 기업의 직접 배출량은 감소하지 않았으며 1.5도 목표 달성에 필요한 배출량을 크게 초과한다고 밝혔다.
- 특히 유럽과 미국 등에서 향후 몇 년 내에 기후공시 의무화 도입에 따라, 스코프3 배출량 보고가 더욱 보편화되는 가운데, 상장기업의 35%가 스코프3를 공개했고, 44%는 탈탄소 목표를 설정했다고 말했다.
- 이 목표 중 30%의 기업만이 넷제로 목표를 포함하고, 17%가 1.5도 경로와 일치한다고 밝혔다.

[\(ESGToday, 2023.05.11\) Mark Segal 기자](#)

1. SK에코플랜트, 중국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 입지 강화

- 7일 SK에코플랜트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전문 자회사 테스(TES-AMM)와 함께,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생산국인 중국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거점을 추가 확보하며 입지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. (이넷뉴스, 2023.05.07) 김진성 기자
- 협약을 통해 SK에코플랜트는 자회사 테스가 포함된 중국 현지 합작법인 지사이클과 함께, 중국 장쑤성 옌청시 경제기술개발구에 연면적 8000제곱미터(m²) 규모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전처리 시설을 설립, 운영함.
- 1단계 시설은 연내, 2단계 시설은 2024년 준공 및 운영을 목표로 하며, 전처리 공정을 통해 배터리 원료 추출 전단계인 블랙파우더를 추출할 수 있음.
- SK에코플랜트와 테스는 기존 폐배터리 후처리 시설 1개소, ITAD(IT자산처분서비스) 시설 3개소에 이번 폐배터리 전처리 시설까지 더해, 중국 내 총 5개의 거점을 보유하게 됨.

2. 현대차·LG엔솔, 이달 美배터리 공장 확정

-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이달 미국 배터리 합작 공장 설립 방안을 확정함. (매일경제, 2023.05.08) 송민근, 이유섭 기자
- 8일 업계에 따르면,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는 26일 이사회를 열고 현대차그룹과의 미국 내 배터리 합작공장 투자 안을 의결할 계획임.
- 이번 합작공장은 조지아주에 세워지는 현대차그룹 전용 전기차 공장인 '메타플랜트 아메리카' 인근에 들어설 예정임.
- 생산능력은 30기가와트시(GWh) 내외, 투자 규모는 5조~6조원대이며, 합작공장은 이르면 2025년 하반기에 배터리셀 양산 체제를 갖추게 됨. 업계에서는 양사가 향후 생산 능력을 확대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음.

3. 삼성전자, 에기연과 재생에너지 통합솔루션 개발 협력

- 삼성전자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(에기연)과 업무협약을 맺고 재생에너지 연구개발 확대에 나섰다. (전자신문, 2023.05.10) 조정형 기자
- 삼성전자는 다양한 에너지를 혼합 사용하는 에너지믹스 기술을 개발하고 재생에너지 통합솔루션을 구현할 계획이며, 태양광 발전, 태양열, 지열, 수열 및 폐열 등 재생 열에너지도 함께 활용할 예정임.
- 삼성전자사업장은 소비 에너지 중 20-40%는 열로 소비되고 있어 전기와 열 에너지의 유기적 결합이 필요함.
- 통합솔루션에는 '섹터 커플링' 기술이 확용되는데, 출력이 불안정한 재생에너지를 다른 에너지 시스템과 연계해 전기와 열 에너지 변환, 저장, 활용 효율 증가가 포함될 예정임.

Weekend ESG Insight

이슈 검색기간 : 2023.05.05(금) ~ 2023.05.11(목)

제공일시 2023 05 19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

글로벌 LNG 시장에 강해지는 규제, 시장 확장에 제동

- LNG 최대 수출국에 해당하는 미국과 호주에서 LNG 사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. 가스수출국 포럼(GECF)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카타르의 LNG 수출량은 약 8천만 톤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았고, 호주와 미국이 뒤를 이었음.
- 미국의 조 바이든(Joe Biden) 행정부는 액화천연가스(LNG) 수출량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, 민주당에서 기후·환경에 대한 영향 평가를 시행하도록 요구했음.
- 민주당의 제프리 머클리(Jeffrey Merkley) 의원 등 44명의 상원의원은 미 환경위원회(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)에 ‘온실가스 배출 및 기후변화에 대한 지침’을 확정하고, 향후 LNG 공급망 전반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하라고 요구했음.
- 민주당 의원들은 환경위원회의 브렌다 말로리(Brenda Mallory) 의장에게 ‘가스를 채굴하고, 수출해 사용되기까지 배출되는 온실가스(GHG)에 대한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정밀조사를 진행하도록 촉구했음.
- LNG에 대한 정밀조사를 요구한 의원들은 미 도널드 트럼프(Donald Trump) 전 대통령이 재임할 당시 LNG로 인한 메탄 배출량은 영향 평가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. LNG로 인한 메탄 배출량을 포함하면 LNG는 석탄보다 많은 배출량을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.
- 온실가스 영향 파악에 대한 민주당의 요구는 이전에도 있었음. 지난 2월에는 76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미 환경보호청(EPA)에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메탄 배출에 대한 규제 강화를 요구하기도 했음.
- 이에 대해 미 바이든 행정부는 지속적으로 글로벌 에너지 기업 및 각국 에너지 관련 부처와 회담을 진행하면서 천연가스의 GHG 배출량이 적다는 사실을 입증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음.
- 한편, 호주 정부는 해양LNG산업이 지불하는 세금을 인상하기 위해 석유자원임대세(이하 PRRT)를 변경하여 LNG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음. 로이터 통신은 지난 6일(현지시각) 호주 정부가 향후 4 회계연도에 걸쳐 세수를 24억 호주 달러(약 2조원)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.
- 호주 정부는 7월 1일부터 공제로 상쇄할 수 있는 LNG 프로젝트에 대한 PRRT 평가 가능 수익의 비율을 90%로 제한하는 주요 제안을 포함하여 가스 이전(transfer) 가격의 책정 규칙에 대한 재무부 검토의 11개 권장 사항 중 8개를 채택할 예정임.
- 호주 정부의 짐 찰머스(Jim Chalmers) 재무장관은 "현재 규정에 따르면 대부분의 LNG 프로젝트는 2030년대까지 상당한 양의 PRRT를 지불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. 이번에 발표한 개정안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"이라고 성명서에서 말했다.
- 로이터에 의하면, 다음 2 회계 연도에 도입될 다른 변경 사항에는 업스트림 기업과 다운스트림 기업의 손실을 균등하게 처리하여 분배하는 것이 포함됨.

[\(임팩트유, 2023.05.10\) 양유혁 기자](#)

[\(임팩트유, 2023.05.10\) 홍명표 기자](#)

- 가스 가격에 대한 재무부의 검토는 이전의 보수 정부에서 시작됐음. 찰머스 장관은 노동당 정부가 이전 정부에서 수락했지만 제정되지 않은 별도의 검토를 통해 8개의 권장 사항을 동시에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음.
- 찰머스 재무장관은 9일 저녁에 2023~24년 정부 예산을 발표할 예정임. 정부는 세입이 예상보다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예산 상황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.